

일본 정권 교체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

2009. 8. 28.

- I. 일본 총선 결과 예상
- II. 민주당 정부의 정책 변화 전망
- III. 경제적 영향과 정책 과제

I. 일본 총선 결과 예상

○ (총선 결과 전망) 8·30 일본 총선거에서 현재 제1야당인 민주당의 압승으로 1955년 이후 최초의 정권교체¹⁾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됨

- ‘정권교체’ 선거로 알려진 이번 일본 총선거에서 거센 야당 바람으로 민주당의 승리가 확실시 됨
 - 8월 19~21일 실시한 마이니치(毎日) 신문의 여론 조사에서 현재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68~108석이 예상되는 반면, 현 제1야당인 민주당은 318~330석으로 압승할 것으로 전망함
 - 8월 23~24일 실시한 산케이(産經)·FNN(후지뉴스)의 공동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과반수인 241석보다 많은 300석 이상의 압승을 예상
 - 8월 22~25일 실시한 아사히(朝日) 신문의 여론 조사에서 현재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103석(89~115석)이 예상되는 반면, 현 제1야당인 민주당은 321석(307~330석)으로 압승할 것으로 보도함
 - 8월 25~27일 실시한 요미우리(讀賣) 신문의 여론 조사에서 현 제1야당인 민주당은 300석 넘어 압승할 것으로 예상함
- 국정운영의 경험이 없는 민주당에 대한 ‘불안’이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사회 양극화 심화시킨 자민당에 대한 ‘불만’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
 - 단, 일본 국민의 보수 성향으로 당이 바뀌는 정권 교체보다 자민당내 리더 변화 등의 정계 개편에 그칠 가능성도 존재함

< 최근 여론조사 결과 >

여론조사기관	예상 의석수		기간
	민주당	자민당	
마이니치신문	318~330석	68~108석	8월 19~21일
산케이·후지	300석 이상	-	8월 23~24일
아사히신문	321석(307~330석)	103석(89~115석)	8월 22~25일
요미우리신문	300석 이상	-	8월 25~27일

자료 : 일본의 각 신문사.

주 : 현재 의석 분포는 자민당 303석, 민주당 112석, 기타 65석 총 480석임.

1) 자민당은 1993년 7월 미야자와(宮澤) 정권에서 실시된 총선에서 제 1당을 유지했지만, 과반수 획득에는 실패해 일본신당 등으로 구성된 비공산연립정권에 잠시 정권을 내줬으나, 자민당은 원내 제1당을 유지했음

○ (정권 교체의 배경) 1955년 이후 장기 집권에 온 현 자민당에 대한 개혁 요구, 세대교체에 대한 요구에 힘입은 야당 바람이 주된 이유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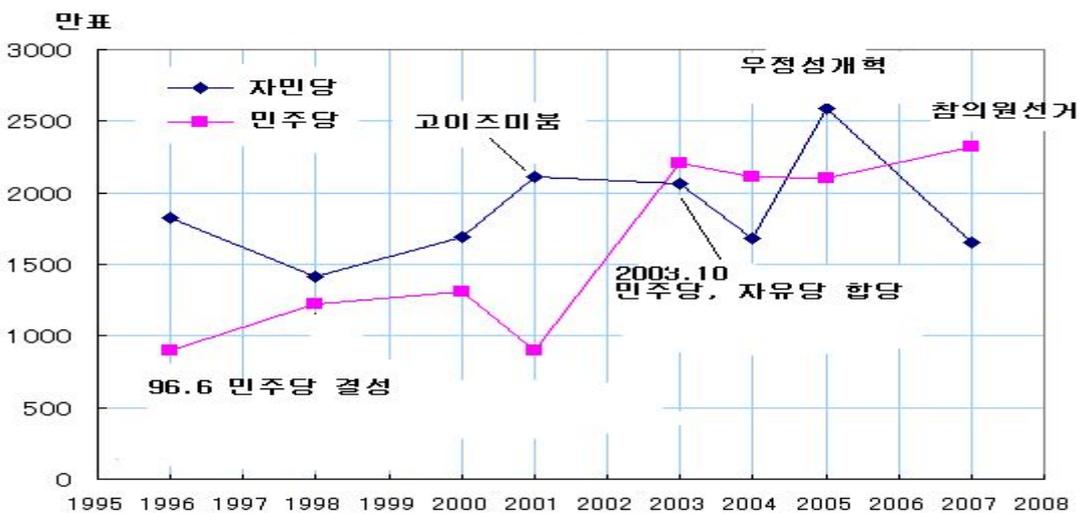
- 경제·재정 개혁의 실패와 잦은 정치적 비리 등으로 자민당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높아짐

- 현 경제 위기에 대한 자민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실망감과 고이즈미 개혁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소득·자산·지역의 양극화 심화에 대한 불만이 민주당 지지로 전환됨
- 재무성의 자료에 따르면 지니계수²⁾는 사회보장 등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고려한 수치가 1981년 0.3143에서 2002년 0.3812로 확대됨
- 특히, 고이즈미 총리의 신자유주의 노선 아래 ‘우정민영화’ 등은 많은 지지를 받았으나 이후 아베, 후쿠다, 아소 정권 때 고이즈미 개혁 후퇴로 인해 정당의 정책 일관성을 상실함

- 세대교체 요구에 따른 야당 바람이 주효

- 세대교체바람으로 자민당의 고이즈미 준이치로(小泉純一郎·67) 전 총리와 고노 요헤이(河野洋平·72) 중의원 의장 등 17명이 대거 불출마
- 정치적 거물들인 후쿠다 야스오(福田康夫), 모리 요시로(森喜朗) 전총리는 각 지역구인 군마 4구와 이시카와 2구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에 고전
- 1998년 민주당이 결성되었고 2003년에는 자유당과의 합당 이후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함

< 민주당 결성 이후 비례선거 결과 추이 >



2) 지니(GINI)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0과 1사이의 값이 가지며, 0에 가까울수록 평등도가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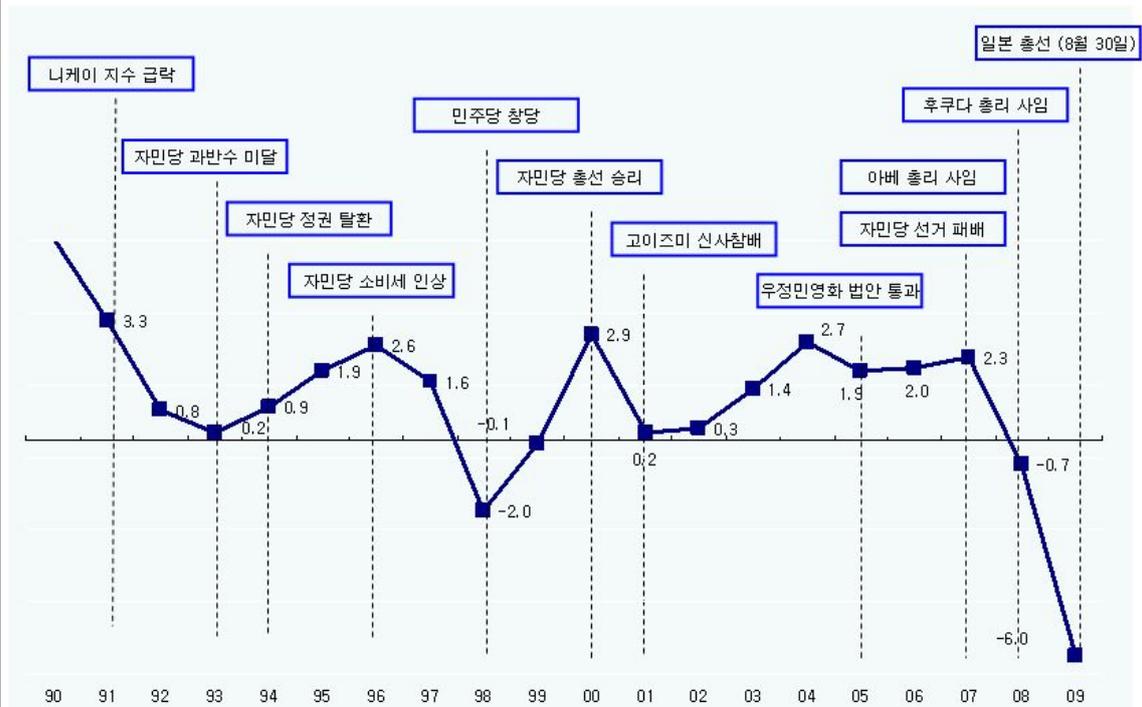
<참고> 일본 주요 경제·정치 일지

- '잃어버린 10년', 고이즈미 개혁 그리고 최근 경기 침체

- 1993년 : 총선에서 자민당 과반수 획득 실패로 정권 창출 실패, 사회주의 정당 주도의 연립 정당에 정권을 내줌(8월9일)
- 1994년 : 자민당 11개월만에 정권 탈환(6월 29일)
- 1995년 : 자민당 소비세 인상으로 일본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이르게 되었다고 비난받음(1월 1일)
- 1998년 : 민주당 창당(4월 27일)
- 2000년 : 자민당 총선 승리로 모리(Yoshiro Mori) 수상직 유지(6월 25일)
- 2001년 : 고이즈미 신사참배(8월 13일)
- 2005년 : 우정민영화 법안 통과(10월 11일)
- 2007년 : 자민당 참의원 선거 패배(7월 29일), 아베총리 사임(9월 26일)
- 2008년 : 후쿠다 총리 사임(9월 1일)
- 2009년 : 자민당은 아소 총리 체제로 일본 총선에 임함(8월 30일)

< 일본 경제성장률과 주요 사건 일지 >

(단위 : 전년대비 %)



자료 : 일본 내각부, IMF.

주 : 2009년의 GDP성장률은 IMF 추정치임.

II. 민주당 집권 후 정책 변화 전망

○ (양당의 정책 비교) 선거 기간중 정권 유지와 정권 교체라는 최대 쟁점을 두고 자민당은 정권을 담당해 온 실적과 안심감을 주로 내세우는 반면, 민주당은 국민 생활을 우선시하면서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주장했음

- 민주당의 주요 정책 : 경제정책은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, 정치정책은 탈 관료 정치중심 체제 구축, 아시아 중시 외교로 요약할 수 있음
 - 특히, 하토야마 유키오(鳩山由紀夫) 민주당 대표는 ‘동아시아 공동체’ 창설을 주장함
- 자민당의 주요 정책 : 경제정책은 경기대책에 대한 실적을 강조하며 성장 전략을 제시, 정치정책은 국회의 슬림화와 지방분권 구축, 자위대 해외 파견 등 국제사회 공헌을 중시하는 외교로 요약할 수 있음

< 민주·자민 양당의 주요 정책 대비 >

	민주당	자민당
경제 및 재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속도로 무료화 등 가계 가치분 소득 증대, 소비 확대, 내수 주도형 경제로 전환 - 환경, 의료, 돌보미 산업을 장래의 성장산업으로 육성 - 4년간 소비세 증세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0년도 후반 연율 2% 경제 성장 실현 - 10년 이내 정부의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- 소비세 증세는 경제 호전 후, 지체 없이 실시
외교·통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위해 아시아 외교 강화 - 대등한 미일 동맹관계 구축 - 일미 자유무역협정 교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일안보체제 강화 - 자위대 해외파견 가능한 법 제정
대북한 정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북 강경 대응 기조 하에 ‘대화 와 협력’ 을 강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
대아시아 외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시아, 태평양 지역의 역내협력 체제 강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브릭스, 아시아 시장을 포괄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정비
정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정쇄신기구를 설치, 정부의 정책 및 지출 검증 - 중의원수를 80석(현재 480명) 삭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정개혁기능 총리에 집중 - 10년 후 중의원수를 30%(144석) 이상 삭감

자료 : 양당의 정책공약집.

○ (분야별 정책) 민주당은 성장·재정·통상·제도 개혁 정책에서 자민당과 상대적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³⁾

- 성장·재정 정책 : 서민과 중소기업 중시
 - 불필요한 예산 절감을 통해 중소기업의 법인세율 인하, 사회안전망 확충 및 어린이 수당지급 등의 복지대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움
 - 민주당은 서민 생활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자녀수당 신설, 고속도로 무료화, 농어민에 대한 소득보상 제도를 강조
 - 한편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18%에서 11%로 인하하여 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

- 통상정책 : 적극적인 FTA 추진 예상
 - 각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미국 중심의 통상 정책으로부터 탈피할 것으로 예상됨
 - 한·일간 자유무역 협정(FTA) 체결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함으로 한·일 경제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한·일 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체결이 예상
 - 미·일간 자유무역 협정(FTA) 체결 본격화라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최근 농민단체의 반발로 미·일간 자유무역 협정 교섭 촉진으로 변경함
 -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무역 및 경제교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체결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

3) 민주당은 1993년 자민당 분열 당시 자민당을 떠난 사람들이 주축이 돼 만든 정당으로 차기 총리가 유력한 하토야마 유키오(鳩山由紀夫) 대표를 비롯 전대표 오자와 이치로(小澤一郎), 간 나오토(菅直人) 대표대행, 오카다 가쓰야(岡田克也) 간사장 등 민주당 지도부 대부분이 자민당 출신이어서 자민당과의 정책적 기조에서는 큰 차이를 크게 보이지 않고 있으나 각론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

- **외교 정책** :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과 자립적 외교 정책 표방
 - 민주당은 미일지위협정의 개정을 제기, 유엔 중심의 외교를 표방하여 자민당의 미일안보체제 강화와는 차이
 - **對미국 정책** : 민주당은 미일지위협정(SOFA)의 재정문제, 주일미군재편 및 주일미군기지의 이전문제 등의 민감한 이슈에 대해 재평가 및 재협상 하려는 정책 추진
 - **對중국 정책** :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위한 협력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적극 추진될 것임
 - **對아시아 외교정책** : 한·중·일 3국 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한 아시아외교를 강화
 - **對한국 정책** : 한일관계의 우호적인 협력관계 재구축을 위한 외교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일관계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에 의한 납치 및 핵, 미사일 문제 해결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
 - **對북한 정책** : 하토야마 민주당 대표는 북한과 '대화와 협력(dialogue and cooperation)'을 추구할 것이나 만약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'강력한 조치 (severe measure)'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

- **제도 개혁 정책** : 정치 주도의 혁신 추구
 - 현재 관료주도에서 정치주도로 전환하여 예산편성, 외교정책 및 중장기 국가비전을 제시할 총리 직속의 '국가전략국' 신설 추진
 - 민주당과 자민당 모두 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민주당은 정부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는 것에 비해 자민당은 행정개혁을 위해 총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
 - 한편, 중의원수에 대해 과다하다고 판단, 민주당은 80석, 자민당은 30% 축소할 것을 제시

Ⅲ. 경제적 영향과 정책 과제

1. 파급 영향

- (영향) 민주당이 집권하면서, 기존의 정책과 차이를 보이게 됨에 따라 일본과 아시아 지역에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전망이다

1) 긍정적 영향

- 일본 산업 경쟁력 강화

- 고속도로 무료화는 관광과 유통혁명을 가져올 수 있어 일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

- 아시아 지역 경제 통합 촉진

- 對주요국 FTA 추진 확대의 영향으로 일본의 對세계 무역량은 증가 예상되어 일본의 對세계 교역 확대
- 한·일 간 자유무역 협정(FTA) 체결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한·일 경제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한·일 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체결이 예상

- 동북아 경제 안정

- 한중일 3국 간 협력 체제 강화는 동북아의 지역 정세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
- 통상, 금융, 에너지, 환경, 재해구제, 전염병대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아시아·태평양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
-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외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한일관계는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
- 하토야마 유키오는 對中 우호인물로 알려져 있어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참배는 중지될 것으로 예상

- **녹색 산업 발전 가속**

- 자민당은 1990년 대비 8% 이산화탄소 삭감을 목표로 하는 반면, 민주당의 경우, 25%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어 녹색 산업의 발전이 기대됨
- 환경 관련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투자를 확대할 것이므로 일본의 환경 기술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임

2) **부정적 영향**

- **일본 경기 회복력 약화**

-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부 지출 감소 정책은 일본 경제 회복에 장애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음

- **대미 관계 소원 가능성 대두**

-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이기 보다는 대등한 미일동맹관계 형성을 위해 주체적인 외교전략 추진이 예상
- 민주당은 미일지위협정(SOFA)의 개정 문제, 주일미군 재편 및 주일미군 기지의 이전 문제와 같은 민감한 이슈에 대해 재평가 및 재협상하려는 정책 추진

- **개혁 갈등 증대 여지 발생**

- 정권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뿌리 깊은 자민당과 이를 지지하는 세력과의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< 민주당 정권 출범의 파급 영향 예상 >

긍정적 영향	부정적 영향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본 산업 경쟁력 강화 - 아시아지역 경제 통합 촉진 - 동북안 지역 정세 안정 - 녹색산업 발전 가속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본 경기 회복력 약화 우려 - 대미 관계 소원 가능성 대두 - 개혁 갈등 증대 여지 발생

2. 정책 과제

○ 한국의 측면에서 보면, 민주당 정권은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이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- 기회 요인으로는 한일 FTA 가능성 증대, 한반도 정세 개선 등임
- 위협 요인은 일본 경기 회복력 약화, 일본과 중국 중심의 아시아 정세 변화 주도권 확립, 일본 녹색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임

○ 향후 민주당 정권 이후, 한일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정치·외교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

- **한일 FTA 적극 추진**
 - 아시아의 이웃국가들과의 무역협정 등 긴밀한 유대 관계를 지향
 - 지난 6월 하토야마 민주당 대표가 방한하여 한일 FTA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음
 - 단, 농수산물 분야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
- **한일간 녹색산업 협력 촉진**
 - 일본의 높은 환경 기술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녹색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
- **한일간 역사적 문제 해소**
 - 하토야마 대표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 우호적으로 나올 것이므로 역사교과서, 위안부, 독도 문제 등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
- **남북일 경제 협력 체제 구축**
 - 일본의 자본, 남한의 개발 경험, 북한의 자원이 결합하는 남북일 개발 전략 구상
- **일본 민주당 주요 정치 세력과의 네트워크 확보**
 - 한일의원연맹총회 등을 적극 활용, 민주당과의 교류 확대 추진